

섬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

육수현 부연구위원 외	
1. 연구의 필요성	- 섬이 지닌 지리적 특성으로 산업기반, 교통 및 접근성, 정주생활 환경 등의 발전기반이 취약한 상황임. 이 연구는 국내 서남권 유인섬의 산업기반 현황, 섬 주민·방문객의 산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섬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
2. 연구의 내용 및 방법	- 이 연구는 서남권 유인섬의 섬별 산업기반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, 이를 중심으로 유형화 시도함. 섬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희망산업 수요조사(설문조사)를 하고, 섬지역에서 주요한 산업인 농업·어업·관광업을 중심으로 섬을 사례 조사하여 산업 분야의 현안을 분석해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제언
3. 연구 분석 결과	- 서남권 유인섬 176개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고 있음. 산업별로 8개 유형으로 분류. 1유형에서 4유형까지는 농가와 어가가 있고, 관광이 있는 유형 총 71(40%)개의 섬이 해당함 - 섬 주민의 희망 산업은 ‘농업(29.5%)’, ‘관광업(28.7%)’, ‘어업(28.2%)’ 순으로 나타나고, 방문객은 관광업이 가장 높았음 - 섬지역의 주요한 산업인 농업, 어업, 관광업이 활성화 된 섬의 사례조사 결과 농업과 어업은 권역을 이루고 있어, 이를 바탕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. 반면 관광업은 섬별로 지원하고, 서로를 연결해 권역을 이루어 규모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- 섬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인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섬을 발전시키되, 섬지역의 농어업 생산 품종 다양화, 스마트기술 보급, 노동인력 보완 등 시설 현대화·자동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
4. 섬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제언	- 섬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상황에 맞게 고도화 추구 필요.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생산기반보완, 부가가치창출, 생산안정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 방안 제언 - 첫째, 생산기반보완은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을 위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다목적용수 활용대책 마련 시급함 - 둘째, 부가가치창출은 섬주민의 농외소득 관련 창업 및 마케팅 역량 육성, 환경오염 및 기후 위기의 영향에 적응하는 고소득 품종 발굴하고 기술지원 필요 - 셋째, 생산 안정화를 목표로, 농업규모화 관련 지원정책 확대 및 외국인근로자(제절근로자 포함)의 섬지역 특화 비자 제도(가칭) 도입을 제안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체계 구상 제안 -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, 섬지역 농어업 및 관광산업 진흥 종합계획(안) 마련을 위한 법령 신설 또는 「섬 발전 촉진법」 내 조항 추가를 통해 체계적인 산업 활성화 제도기반 구축 필요

섬종합발전계획 성과 분석

임재훈 부연구위원 외	
1. 연구의 필요성	- 1986년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존,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「도서 개발 촉진법」(現 「섬 발전 촉진법」)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‘도서종합개발계획(現 섬종합발전계획)’을 수립하고 시행 - 1988년 시행된 ‘섬종합발전계획’은 현재 제4차 계획(2018-2027)까지 추진되었으나,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 존재 - 본 연구는 ‘섬종합발전계획’의 성과를 분석하고 계획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
2.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	- 범위는 10년 단위 수립된 계획 간 제도적 토대, 수립 배경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제4차 계획으로 한정 - 성과는 계획 차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,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미 실시* * 성과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가 생성되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 - 성과는 정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, ① 계획의 제도적 토대 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③ 사업 추진의 적절성 ④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
3. 성과분석 결과	- 제도적 토대에서는 계획 대상인 개발지정섬 정의의 적절성 문제, 타기본계획과 연계 지침 부족, ‘섬종합발전계획’ 추진체계의 이원화* 등의 문제 존재 * 2009년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개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, 개정 이후에는 특수상황지역에 속한 섬은 행정안전부, 성장촉진지역에 속한 섬은 국토교통부로 구분하여 추진체계의 이원화 발생 - 수립단계에서는 목표와 추진전략의 연계성 부족,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부족, 시설사업 중심의 제한적 사업 수립의 한계점 존재 - 사업의 편성은 섬 유형별 다양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섬 유형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,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요인 발생으로 사업 변동성이 심화되어 수립한 계획의 적실성이 저하 - 계획에 대한 평가는 상위(포괄보조사업)의 일부로서 제한적 평가,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이 상이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환류 제한
4. 결론 및 한계점	-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‘제4차 섬종합발전계획’ 변경계획 수립 필요* * 제4차 변경계획은 섬 관련 타기본계획을 총 망라하여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 연도별 사업 편성(자율발굴사업)을 시행하되, 섬 간 불평등, 편향적 사업 추진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행안부, 한섬원에서 사전심의 - ‘섬종합발전계획’과 섬 관련 타 기본계획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종합계획화(Master-Plan)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섬 발전사업 추진 - 섬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섬별 맞춤형 종합계획(Master-Plan) 수립을 통한 섬 발전사업 추진 - 추진체계의 일원화, 평가체계 설립 등을 바탕으로 ‘섬종합발전계획’의 환류체계 구축